

#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556
----------	------

발의연월일 : 2022. 11. 21.

발 의 자 : 금광연 의원

## 1. 제안 이유

- 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
- 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수산물·가공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과 관련, 법 체제 통일성 확보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도모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안 제1조~제3조)
- 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안 제4조~제6조)
- 다.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규정(안 제7조~제10조)
- 라.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규정(안 제11조~제15조)
- 마.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안 제16조~제17조)
- 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안 제18조~제31조)

## 3. 개정조례안 : 덧붙임

##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행동강령」에 따라 하남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하남시의회 의원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하남시(이하“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하남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모든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조례는 하남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의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의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 임용·승진·전보·포상·징계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6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겸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 등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 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7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적 이익을 위하여 의회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의2(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

③ 의원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기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또는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의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8조(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의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③ 의장은 제1항 정보 이용 제공이 제한되는 직무 범위에 대하여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의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의원은 자기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공직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2. 의회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과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의회 의무 또는 부담 이행을 부당하게 넘기거나 지연하는 행위
3.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에 의회 업무를 부당하게 넘기거나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넘기는 행위
4. 그 밖에 직무관련자, 시 또는 시의 산하기관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0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의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③ 제12조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써 별표 1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
  2.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3. 의원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 등
  4. 의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소속 구성원 등 의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의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5. 의원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
  6.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 ④ 의원은 제3항제4호인데도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로서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의원은 자기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않는다.
- ⑥ 의원은 다른 의원 또는 의원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제11조(국내외 활동 제한 등)** ①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활동 사유·경과,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단체 및 지원 내용을 분명하게 밝혀 의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의원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아 국내외 활동을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 내용 및 제2항에 따른 활동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2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기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 요청 명세를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12조의2(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제12조제5항에 따른 초과사례금 신고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 액수를 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의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초과사례금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반환 사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영리행위의 신고)** 의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한하는 영리행위 외에도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의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하남시의회 의원 및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의원 자기가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5조(성희롱 금지)** 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 또는 소속 직원에게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제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제1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의원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자기 및 위반자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 받은 의장은 신고사항이 조례에 위반되는지 여부 및 처리 방향 등에 대하여 제1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④ 의장과 제18조에 따른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은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⑤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의원으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법」에 따른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의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의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의원 자신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금품 등을 받거나 제공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의원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 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제공받은 금품 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의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해야 하는 금품 등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1. 멸실·부패·변질 등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수수 금지 금품 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 등을 넘긴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감사·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임에도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제출·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금품 등을 넘긴 자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의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제공자(제공자를 알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등, 제공일시 및 넘긴 경위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 제6장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

제18조(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한 의장 자문에 따르게 하기 위하여 조례로써 의회 직속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2.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 승인에 관한 사항
3.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4. 조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조례 운영 및 이행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1. 의원
  2. 하남시 소속 공무원
  3. 정당 당원
  4. 위원이 당해 안건의 이해관계자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 위원만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2회 이상 공개모집을 했는데도 위촉 대상이 자문위원회 구성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항 규정이 있음에도 시 소속 공무원 또는 의원을 위원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비율은 전체 위원의 2분의 1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제20조(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의장은 위원이 중도 사퇴, 질병, 장기 여행, 품위 손상, 기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자문위원회 위원장)** ① 자문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해 안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한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하고 있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 이해관계자에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위원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 회의를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23조(자문위원회 회의)** ① 자문위원회 회의는 의장 자문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22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의원은 제3항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 이를 제외한다.

⑤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 내용
4. 자문 내용

**제24조(의견청취)** ① 자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의 통지)**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의 비밀 유지)**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7조(간사)** ① 자문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제28조(자문료의 지급)** 의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30조(행동강령의 운영)** ① 의장은 의원에 대한 조례 교육·상담 및 행동 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관장한다.

② 원활한 조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31조(교육)** ① 의장은 소속 의원에 대하여 강령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지방의회풍토 조성을 위하여 의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 방지와 직무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0조제3항제1호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의원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2. 경조사비 :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한다.

비고

-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 다. 제3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의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12조제1항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 40만원

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가목에 따른 공직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에 따른다) :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 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외 활동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	------	------

제 출 자	성명	정당
	소속 위원회	연락처

활동의원	성 명	직 위	정 당	소속 위원회

활동개요	활동목적			
	지원기관(단체)		지원받은 내역	
	활동기간		방문지역 및 기관	

주요활동내역 (일정·활동내역별 )	
--------------------------	--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 국내외 활동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_____천원 (※ 1회 평균 대가 _____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_____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_____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좌번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영리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 명		선거구분	지 역 구	
	소속위원회 (정당)			비례대표	
영리행위 현 황	명 칭				
	직 위			영리행위 기간	
	보 수	(택) 연 월	원 원	전화번호	
	영리행위 장소 (주소)				
기 타					

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영리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위원회 (정당)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신 고 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장      귀하

수수 금지 금품 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소속위원회(정당)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신고자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고 접수 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 일/인 도경 위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 장소	처리 내용	처리 일	의장 확인
						소속	정당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